

KNSI 참고자료 2

북한의 핵실험에 담긴 억지(deterrence)와 협상(compellence)의 논리 -레드라인(red line)의 광기에 대한 성찰1)

이정철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I. 복합적 안전보장체제의 비대칭적 해체와 핵실험
- II.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 III. 미국의 대북 핵전략 : 현재 위협의 미래화와 무시전략(hawkish neglect)
- IV. 핵실험과 협상력 - 억지력의 현재화와 북한식 시간관의 강제(compellence)
- V. 유엔 결의안에 대한 '선전포고' 론적 해석
- VI. '포기를 전제로 한 핵 억제력의 활용' 이라는 역설?
- VII. 북한의 시한부 통첩?
- VIII. 핵실험은 금지선(red line) 위반인가?
- IX. 북한식 주권개념의 수정과 국제사회의 동시 책임론

제네바체제로 상징되는 한반도 비핵화 체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이면에,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보호한다는 적극적 안전보장에 관련국 특히 북한이 동의하는 복합적 안전보장체제였다. 모든 핵 협상은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개념을 담고 있게 마련이다. 제네바 체제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자칫 안전보장 문제를 놓치기 쉽지만, 북한 당국 특히 군부의 입장에서는 안전보장 문제가 더욱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아도 과도한 얘기는 아니다.

한편 관련국들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받는 것을 묵인하기로 하였다. 어느 특정 국가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공격을 하게 될 경우 해당국은 미국으로부터 핵보복

1) 본 글은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10월호에 실린 글임을 밝힙니다.(아주 일부만 수정하였음)

공격을 받게 된다는 핵우산의 논리를 관련국들이 수용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의한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각 30억 달러와 1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경수로 제공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던 것이다.

I. 복합적 안전보장체제의 비대칭적 해체와 핵실험

이 점에서 제네바 체제의 붕괴는 지난 10 여년간 유지되어 온 한반도 비핵화 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래 사실상 소극적 안전보장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지속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이나 미일동맹의 질은 군사혁신을 통해 보다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전환해갔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의 전개는 그것이 누구의 탓이었던 간에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비핵화 체제가 자신들의 체제생존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불균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7월의 미사일 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의한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안전보장이 유효한 상태에서, 중국마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한 현실은 비핵화 체제가 북한의 체제생존에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불균형이라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피할 수 없는 외길이었던 것이다.

II.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 원료 확보, 핵 무기화 그리고 실전배치라는 3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핵실험은 마지막 단계에서 실전배치의 최종적 표현이자 정치적 기술적 징표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전 배치없는 핵실험 그 자체만으로는 이전 단계의 핵 무기화 즉 조립 및 고폭 실험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핵실험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핵무기의 운반수단, 특히 장거리미사일의 확보 그리고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를 갖추므로써 제작된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날려 보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능력까지 갖추 때 당사국은 현대적 억지능력을 갖춘 핵클럽으로 인정된다.

북한의 경우, 자신의 핵전력을 방어하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고도로 복잡

한 조기경보체제, 강화되고 확장된 지휘통제체제, 발사대 보호시스템, 위성정찰 및 위치추적 시스템, 미사일 요격체제 등을 북한이 갖추고 있다고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들에 대해 대규모 선제공격을 개시할 때, 북한이 이를 뚫고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있는 2격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보도는 지난 7월의 미사일 훈련은 미국의 대북 선제(예방) 공격에 대해 북한이 보복 능력을 보여준 지휘소 훈련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당시 미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시험을 한 것으로, 이 시험이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2단계 발사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재평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산악지대에 미사일을 배치해 놓은 뒤 대체로 핵 공격의 피해를 입지 않을 병커에서 통제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 훈련에 기초해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핵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보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미국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Insight on the New, 2006/8/30)

후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 1%라도 그같은 평가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능력과 핵클럽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위협의 실체를 축소함으로써 군사적 모험주의를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그 결과가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III. 미국의 대북 핵전략 : 현재 위협의 미래화와 무시전략(hawkish neglect)

지난 5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더라도 핵 클럽국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과장된 것이고 지난 9일 실시된 핵 실험 자체에 대해서도 실패 혹은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부시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설령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더라도 그 위협을 현재화하지 않고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연기하는 대북 무시전략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현재 위협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위협의 미래화전략이라 하겠다. 힐 차관보의 발언이 실제 북한의 핵 능력이 명백하지 않거나 위협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동 전쟁 수행 능력 제고 등 다른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축소,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이 정치적 의도로 무시전략을 쓰고 있다면, 우리의 판단 능력은 제약되고 따라서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한 위기의 예방은 근원적으로 불가하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위기인 것은 이 점에서이다.

IV. 핵실험과 협상력 - 억지력의 현재화와 북한식 시간관의 강제(compellence)

한편 북한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플루토늄의 양적 증대를 통해 핵 억지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체제 내구력이 약해짐에 따라 핵 위협마저도 동반 쇠약해진다는 핵 억지를 넘는 포괄적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양국은 서로 다른 시간관(time table)을 가지고 위협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엇박자를 형성해왔다. 북미협상이 실패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만일 북한의 핵실험이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백악관의 이같은 시간 개념에 수정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협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이 자신들과 동일한 시간관에 서도록 하는 것만이벼랑끝 외교를 성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위협의 현실화만이 미국 국내 정치의 압력을 동원해 백악관의 정교한 대북 무시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신보의 10월 5일자 평양발 보도가 의미하는 ‘주도권은 조선이 쥐고 있다’거나 ‘선수를 치고 초반전에 벌써 시한부를 정한 것’ 혹은 ‘시한부를 정할 권한이 사실상 조선 측에 있다’ 는 등의 주장은 이번 핵실험이 북한식 시간관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V. 유엔 결의안에 대한 ‘선전포고’ 론적 해석

하지만 이번 핵실험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인식이 매우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위협의 현재화가 없는 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힘의 추가 자신에게 기울지 않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10월 3일자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안이 곧 사실상의 선전포고이고 핵실험은 이에 대한 상응한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금융제재 등 대북 고립 전략이 국제사회에 통용됨에 따라 이를 좌시하는 것은 더욱 더 고립의 심화를 수용하는 것일 따름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동의한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더욱 재촉한 꼴이 아닐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나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내정 소식은 북한의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을 더욱 자극하였음에 틀림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시된 한미동맹의 견재(?)는 국내 보수세력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위기감을 더욱 자극하고 노무현 정부의 민족공조외지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 재편을 한국의 군비증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존재는 곧 남북미간에 동맹의 안보딜레마(alliance's security dilemma) 유사 상황을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낳은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민족공조에 대한 절박한 요청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우선적 가치를 은폐하는 치장물일 따름이고, 결국 이는 미국의 대북 인식에 조력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하지는 않았을까?

VI. ‘포기를 전제로 한 핵 억제력의 활용’이라는 역설?

억제력을 강화하는 만큼이나 협상력은 고갈된다. 체제유지를 위한 억제력의 강화가 결과적으로 체제생존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작계 5030의 군사교리가 기능하는 한, 억제력과 협상력을 대체관계로 대립시킨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억제력은 결과로서만 말할 따름이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한 무기일 따름이므로 대미 협상에서 협상력의 확보와 강화는 사활적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협상체제의 미래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핵실험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했을 수는 있지만, 협상력의 복원은 북한의 의도대로 되기가 불가능하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보상은 없다’라는 부시 행정부의 원칙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기 때문이다. 복음주의(evangelical) 도덕외교에 집착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위협에 대해 유화 appeasement) 정책으로 화답하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북한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 듯하다.

10월 3일자 외무성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실험의 안전성 담보, 핵 이전 불허 및 선제사용 불가, 핵군축과 비핵화를 전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절하게도 10월 5일자 조선신보는 외무성 성명에서 주목할 지점은 특히 비핵화항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억제력의 영구 확보’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핵실험’이자 ‘포기를 전제로 한 핵 억제력의 활용’이라고 설명한다. 억제력의 확보보다 협상력의 강화를 우선시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역설적 행동은 무엇을 의도하는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것이 북한의 일방적 양보와 불법행위의 先시인을 의미함으로써 동시행동원칙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이 동 프로세스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일괄타결식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군사적 억제력을 대등하게 갖춘 상태에서야 비로소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는 안전보장 체제가 자신들에게만 불균형적으로 해체된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놓을 때, 차후에 시작될 협상판에서 제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얘기하는 핵 폐기를 위한 핵실험론의 본질인 것이다. 협상이 깨지더라도 이라크식 운명이 되지 않는 길이기도 함은 물론이고.

VII. 북한의 시한부 통첩?

북한은 6월 1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힐 차관보를 초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초강 경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7월의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었다.

그리고 8월 26일 동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나 유지해 보려고’ 6자회담을 파탄내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간선거용으로 자신들에 대한 강경책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시점을 시한부로 설정하고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자신들이 공언한 것은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것이 북한식 투명성의 요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경고는 현 상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북한은 미국의 무시정책이 지속된다면 다음 단계로 돌입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시한은 명백히 미국의 중간선거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 서해상의 NLL 교전, 새로운 탄두개발 및 실험, 더 큰 핵실험의 강행 그리고 본격적인 대미 공세로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실시 등 다양한 위협 수단이 10월 중으로 궤도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실험 자체보다도 미국 본토로의 운반 투사 능력이 더욱 위협적이다. 이 경우 미사일이 핵 능력과 결합된 협상력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늘의 핵공방에서 시한부를 설정한 권한이 사실상 조선 측에 있다’는 조선신보의 언급은 이같은 주관적 희망을 드러내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희망만큼 좌절과 위기가 휘몰아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지만.

VIII. 핵실험은 금지선(red line) 위반인가?

의도나 상황이 어찌되었건 핵실험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북핵 저지를 한국 외교의 총체적 목표로 삼아왔던 우리로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볼 때, 북핵 저지는 이미 2년 전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시점에 실패한 것이었다. 다만 우리는 애써 그 위협을 부정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날이 우세를 점해가고 있던 군사력의 대북 우위에 자족하며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갖는 위협의 미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뒤늦게 깨달은 위기가 광기를 불러 일으켜 이성적 판단을 방해한다면 우리에게는 건딜 수 없는 미래만 남을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금지선은 전쟁이나 평화이냐의 계선이 있었을 따름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이를 금지선으로 설정하고 제재를 개시하는 자체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면, 그같은

금지선은 현재의 우리에게 무의미할 따름이다. 금지선을 위한 금지선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황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북한이 한일동맹과 미일동맹의 군사혁신에 비견될 전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균형으로서 핵 억지력의 과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군사 대결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로서 유지되는 평화는 제네바 체제의 평화에 비해 분명 고비용의 체제이다. 이제 비핵화 시대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인지도 모른다. 한반도는 공포의 균형 그리고 이에 따른 안보 딜레마가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고비용의 평화에 만족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이니 예방적 방위니 하는 미국의 신 군사교리가 불러온 자업자득적 고비용 체제이다. 이 시대에 시체가 된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이 더욱 실제적인 요구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전쟁보다는 그래도 그것이 차선의 선택이다.

IX. 북한식 주권개념의 수정과 국제사회의 동시 책임론

북한의 자주권 개념은 핵 정책상 억지나 협상 칩 개념만큼이나 위신(prestige)을 의사결정의 주요한 전제로 한다. 북한은 주권이 보편적 가치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는 지구적 주권개념을 거부하는 능력과 의사를 지닌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90년대 고립될 대로 고립된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을 통해 북한은 보란 듯이 주권 국가의 자부심을 확대 재생산하였다.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중국의 자조는 이 시기 즉 90년대 고난의 행군 경험에 대한 중국의 자평이다.

90년대 북한의 피포위의식(siege mentality)이 강고한 주권 개념을 만들어 주었다는 바로 그 점에서 그 책임은 국제사회가 공히 매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 낙후한 주권개념이 지속된 1차적 책임이 북한 스스로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이를 확대재생산한 데는 주변국의 공동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에 의해 주권이 제약된 데 대한 대가를 향유해본 적 없는 북한에게 주권 침식을 감내하는 보편적 가치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패권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웃 나라들의 패권적 행태가 연일 반복되지만 시민사회의 이중성이 심화되어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독 북한에게만 보편적 가치를 강요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그 해법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능력과 의사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모든 강요와 힘의 논리는 당사국에게는 패권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동책임론에 대한 공감대가 사라질 때,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과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레드라인을 통해 협상의 끝을 설정하려는 광기가 작동할 경우 레드라인의 여린 속성(the thin red line) 과국을 막지 못할 것이다. 냉철하고 끈기있는 대화만이 끝없는 협상을 통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음은 인류사가 경험한 가장 소중한 경험이다. (2006/10/23)

